

나주 금천 ~ 화순 도암 4차선 도로 신설

12km 국지도 58호선 예타 통과 사업비 2855억...내달 국토계획 확정 혁신도시 ~ 전남 동부권 최단 교통망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와 화순군, 전남 동부권을 잇는 최단거리 도로 교통망이 구축된다. 나주시는 '나주 금천면-화순 도암면' 총 12km 구간, 국지도 58호선 4차선 도로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월 9일 정부재정사

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이어 이달 24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지도 58호선 확포장 사업(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비 규모는 총 2855억원으로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확정 고시 후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구간 소요 시간(거리)은 기존 약 26분(23.2km)에서 11분(12km)으로 단축된다. 나주와 화순 양 지역뿐만 아니라 무안국제공항, 혁신도시 산업특구단지 및 문화관광자원 접근성 향상 등 전남 중부권 발전에 시너지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나주시는 2018년 1월부터 예타 조사가 통과되

기까지 국토교통부, 기재부, 국회 등을 오가며 이번 사업 선정을 적극 건의해왔다. 특히 16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와 혁신도시 활성화, 올해 한국에너지공단 착공 등으로 인한 인구·교통 수요 증가 대비와 중·동부권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 금천과 화순 도암을 잇는 4차선 도로 신설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과 차량 이동의 안전성, 쾌적성 등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지역을 넘어 전남 중·동부권 교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민단체, 나주시장·나주교통 대표 고발

시내버스 보조금 비리 규명 촉구

나주시민사회는 시내버스 보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인규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나주교통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교통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돼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 이날 참석자들이 따르면 나주시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76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개선되기는 커녕 상습적인 노선 결행과 불법 회차, 난폭운전

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었다. 안희만 나주시민사회 전 상임대표는 "나주시가 지난해 나주교통 지선 운전원 임금으로 지원한 79억 원 중 61억 원만 지급해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착복한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주시가 지방재정법과 나주시 조례에 명시된 보조금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금지조항을 무시한 채 운송원가제로 이미 지급한 교통카드 할인, 학생 할인, 환승 손실보전비 41억 원 등을 추가로 나주교통에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는 나주교통으로부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사업 건별 세부 정산서가 아닌 나주교통의 일반 재무제표로 회계 감사를 시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장흥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 "지원금 지급 약속 이행하라" 집단행동

"공공기관 주민 우롱" 두달째 시위 서부발전 "법적 근거 없다" 외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흥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이 서부발전(주)에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켜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 주민들은 지난달 7일부터 서부발전 측이 당초 약속한 지역발전기금(10억원) 지원을 촉구하며 두 달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과정에서 서부발전측은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해소와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차원에서 주변 3곳에 지역발전기금을 지원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서부발전측은 부산면 지천마을에만 6억5000만원을 현금지원하고 나머지 부산면 용반마을(10억원)과 유치면 일부(7억원)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원을 미루고 있다. 용반리 주민들은 "공공기관이 약속을 어겨 선량한 농촌주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산자부)가 나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반리 주민들은 서부발전측에 지역발전기금



장흥군 부산면 용반마을 주민들이 장흥군청 앞에서 서부발전의 발전기금 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며 지난 6월 30일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달 16일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윤 서부발전 장흥출장소 소장은 "당초 주변마을에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해당마을들은 풍력발전소 건설을 끝까지 반대했고, 상호협약체결도 거부

해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풍력발전소는 건설을 두고 주민과 발전소간 개발행위 심의(불허가)-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갈등을 벌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2월 착공했으며, 오는 11월 준공 준공을 목표로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승욱 강진군수에 감사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확보 공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승욱 강진군수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감사패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준 이승욱 군수에 감사의 뜻을 담았다. 강진군은 매년 전라남도-시군 출연 계획에 따라 5000여만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강진군 업체 중 약 35%가 재단의 신용보증

을 이용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 도내 유일한 공적 금융기관이자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이다. 2001년 출범해 글로벌 금융위기, 구제역·조류독감, 재해 피해 등 큰 위기 때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지자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신청·접수

대학생 250명, 내달 3일~17일

함평군은 2021년도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은 올해 신설된 '지역인재 대학생' 분야로 기금 7억5000만원에 250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경우 최대 300만원,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상반기 장학금 혜택을 받은 대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부모 모두 7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부모 중 1인이 7년 이상 거주로 변경하는 등 필수 거주기간 자격요건과 성적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함평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7년 이상 계속 거주 및 관내 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 기준)로서, 국가장학금을 받드시 먼저 신청 후 접수해야 한다. 희망자는 9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평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인재양성추진위원회 위원장)는 "하반기에는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10월부터 생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화순군이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보장 강화로 한발 앞선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